

북한에 재생가능 에너지 지원해야

대북 에너지지원 국민운동본부 발족 ... 태양열 · 풍력 지원 바람직

민주노동당과 한국발전산업노조, 환경단체와 재생 에너지기업들은 9월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북 에너지지원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운동본부는 발족식에서 “북핵 위기의 본질은 군사적 갈등이 아닌 에너지난에 따른 생존권 문제”라며 “중동에서 원유나 중유를 사서 일회적으로 북한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같은 비용으로 태양열 · 풍력발전소를 짓는 등 재생가능 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북한에 재생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단기간에 에너지난을 해결하고, 남한의 일자리 창출 및 재생 에너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으로 <선샤인 프로젝트>라고 명명했다.

북한은 1991년 소련의 해체로 원유수입이 어려워지고, 소련기술에 의존했던 발전설비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동률이 현격히 떨어졌으며 1995-96년 홍수 등 자연재해로 전력인프라가 붕괴되고 석탄 채취량이 급감했다.

북한의 1차에너지 총소비량은 경상남도 소비량에 불과하고, 1인당 전력소비량은 남한의 6분의 1 수준에 그쳐 밥을 짓거나 난방을 위한 연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본부는 북한의 전력부족분을 해결하는데 남한에서 송전한다면 10조원, 경수로 건설시 8조6000억원, 재생 에너지 지원시 8조9000억원이 소요되고, 원자력발전소 건설시 140개월이 필요한 반면, 풍력발전소 등은 1-3개월이면 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기존 발전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산업단지에는 풍력발전, 마을단위에는 바이오매스, 각 가정에는 소형 풍력 및 태양열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생가능에너지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재생에너지 협력방안>을 공식의제로 채택하고, 개성공단 등에 재생에너지단지 설치를 추진하라며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 이재정 통일부장관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본부는 앞으로 통일부장관과 간담회 및 공개토론회, 국제워크숍을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대북지원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국내에는 2006년 기준으로 태양광 830여개, 풍력 150여개 등 모두 1500여개의 재생가능 에너지기업이 있으며 선진국 대비 기술력은 80-70% 수준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9/06>